

2003 연구보고서(수시과제) 110-1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을 위한

# 신정부의 여성정책 10대 과제

(참 고 자 료)

연구책임자 장하진 원장

공동연구자 김재인 선임연구위원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김미경 연구위원 김원홍 연구위원

김혜경 연구위원 문미경 연구위원

민무숙 연구위원 박영란 연구위원

양애경 연구위원 유희정 연구위원

김이선 전문연구원 황정임 전문연구원

한 국 여 성 개 발 원

## 신정부의 여성정책 10대 과제 선정배경

국가의 경쟁력 확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여성인적 자원 개발과 활용 등을 통해 그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들이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배양하고, 여성관련 시책들이 국민의 생활 속에 확산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세기이며 관점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21세기에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여성의 삶의 질의 향상과 활동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발전에 여성역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해나가야 할 여성정책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자료는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10대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이들 과제의 선정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정책 공약을 포함하여 앞으로 5년 동안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즉 정책실행의 중심 내용을 선택하여 집중한 것입니다.

둘째,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과제들 중에서 중점 및 주요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중점과제는 특히 신정부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주요과제는 중점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더불어 함께 추진해 나가되, 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입니다.

셋째, 본 10대 과제는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한정하였습니다.

넷째, 본 10대 과제에는 민간부문에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은 가급적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회사적 의미를 안고 출범할 신정부가 여성정책의 단계를 한차원 높이고, 진정으로 여성에게 의미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부디 본 자료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3. 1. 29.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장 하 진

# 목 차

## 제1부 중점 추진과제

1. 보육 .....	3
2. 여성 일자리 창출 .....	14
3.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	24

## 제2부 주요과제

4.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제고 .....	37
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 .....	46
6. 성매매 방지 .....	53
7. 여성빈곤 해소 .....	62
8. 가족정책 .....	70
9. 평등문화 정착 .....	78
10. 여성정책 추진체계 .....	86

## 제1부. 중점 추진과제

# 1

## 보 육

- 영유아 차등 지원제 확대로 정부의 자녀양육지원 기능 강화
- 다양하고 질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
- 도시 저소득지역 및 농어촌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행정체계 정비로 운영지원의 효율화

### 1 영유아 지원 확대

- 우리 나라 0 - 2세의 경우 보육시설 취원율은 10.0%이고 3 - 5세의 경우 30.6%임. 이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3-6세 유아들의 서비스 수혜기회는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구 유럽은 70%-90% 수준,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중부 유럽은 90%-100% 수준으로 매우 높음(1999년 현재).
-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이 민간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93.9%). 민간위주의 운영은 보육의 사각지대를 형성하여 보육수요자들의 영아보육, 야간보육, 농어촌보육, 장애아보육 등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부모들은 질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 비용부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국공립 시설을 선호함. 따라서 도시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국공립 시설 확충이 요구됨.

#### ○ 도시 저소득층 영유아 우선 보육 보장

- 현재의 보육료에 대하여 부모들의 42.3%가 부담을 느끼고 있음(서문희외, 2002).
-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유아는 총 취원아의 20.1%임. 지원아 비율을 취원아의 50%까지 상향시켜야 할 것과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등보육료제도 도입이 요구됨.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에 의할 때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0 - 5세 영유아는 183,776명으로 추계됨. 국공립 시설에서 이들을 우선 보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확대가 요구됨. 보육시설들이 정부지원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희망하는 보육료는 이것보다도 낮음. 즉, 정부에 기대하는 수준은 실제 비용과 희망 비용의 차액으로 볼 수 있음.
- 부모들이 요구하는 보육료는 반일제의 경우 5만원, 종일제의 경우 10만원 정도임.

- 외국의 사례에서 영국은 아동보호세금지원을 통해 법적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호주, 핀란드의 경우도 사립이나 가정탁아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 또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모부담비용을 전체비용의 30%를 넘지 못하게 상한선을 정하는 국가도 있음(스웨덴, 핀란드).
- 우리 나라의 경우 부모들의 보육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립에 직·간접적인 공적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립기관은 지원을 받기 위하여 공립기관에 부응하는 질적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취약계층 지원 외국의 사례로는 영국의 Sure Start Project, Education Action Zones, 미국의 Head Start, 프랑스의 ZEP(저소득층 자녀지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정책, 호주의 빈곤지역보조금(Disadvantaged Area Subsidy) 등이 있음.
- 방안
  -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0 - 5세 영유아를 우선 지원함.
  - 목표치는 2004년 20%에서 2008년 80%임(5세 100%). 지원방법은 해당 아동별(바우처 제공) 지원이며 차등보육료제도를 도입함.

#### ○ 농어촌 지역 영유아 우선 보육 보장

- 민간주도의 보육활성화 정책 결과 농어촌 보육이 미비함. 전체 영유아의 농어촌 지역 영유아 비율은 18.5%이나 보육시설 취원율은 9.4%로 농어촌 지역 국공립 시설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방안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0 - 5세 영유아 전원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목표치는 2004년 20%에서 2008년 100%임.
- 지원방법은 해당 아동별(바우처 제공) 지원이며, 농어촌 지역 읍면부 소재(1,422개)에 최소한 1개의 기관을 확보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함.

○ 해체 가정 영유아 우선 보육 보장

- 한부모, 조부모 등이 양육하는 0 - 5세 영유아를 우선 지원함. 지원대상은 한부모, 조부모 등이 양육하는 0 - 5세아로 2001년 현재 6.7%를 적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하며, 목표치는 2004년 10%에서 2008년 50%임.
- 지원방법은 해당 아동별(바우처 제공)로 지원함.

○ 장애아 우선 보육 보장

- 0 - 5세 영유아 중 장애 영유아는 10만명 정도 추산되나 현재 장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영유아는 5천명 정도로 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어려움이 큼. 장애영유아 대상 보육시스템이 정비, 지원되어야 함.
- 방안
  - 취학 전 0 - 5세 장애 영유아를 우선 지원함. 지원대상은 0 - 5세 영유아 중 중증 장애아(장애아 출현율 2.7% 적용)임.
  - 목표치는 2004년 10%에서 2008년 50%이며 전국에 장애아 전담시설을 매년 12개소씩 증설함.

- 지원방법은 해당 아동별 지원(바우처 제공)이며, 기관 증설, 장애아 3명당 보육교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함.

## 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현장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함. 보육현장에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한편 보육정원 대비 현원은 86%로 영유아들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 영아자녀를 맡길 보육시설이 없음
  -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저녁까지 돌보아주는 곳이 적음
  - 저소득층 부모들에게는 보육료가 비쌈
  - 보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함
- 선행연구에서 양육지원서비스의 기관별 이용 사유를 살펴보면 ‘아이의 개발을 위하여 이용한다’가 62.5%임(보육실태조사, 2002). 부모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보육시설 이용 부모들은 집에서 가깝고, 비용이 저렴하고, 부모의 취업시간을 고려하여 종일제 및 연장제(야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질적수준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

### ○ 영아(0 - 2세)보육 활성화

- 0 - 2세 총 인구 대비 영아보육율은 10.0%로 3 - 5세 유아대상 보육율 30.6%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0 - 2세 영아 보육이 저조한 것은 우리 나라 기혼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M자형이게 하는 요인임.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됨.
- 방안
  - 취업모의 영아 보육비를 지원함.
  - 영아를 두고 일하는 기혼여성 중 저소득층 지원 차상위 계층의 영아 자녀를 대상으로 함.
  - 목표치는 2004년 10%에서 2008년 50%임. 지원방법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 한하여 직접 지원함.

#### ○ 노동 시장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유도

- 취업어머니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음. 여성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은 도소매 숙박업(33.2%), 개인사회서비스업(30.1%), 제조업(15.0%) 순임을 고려할 때 가족 내 자녀양육 지원 체계가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됨(한국여성개발원, 2002).
- 이와 같이 부모들의 직종이 다양화되면서 저녁 늦게까지 자녀를 돌보아 주는 야간연장형, 휴일 보육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활성화 방안에서는 교사의 근무조건, 시설의 안전문제, 운영 프로그램, 시설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함. 특히 이혼가족이 늘어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 직장 등의 문제로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는 부득이한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 24시간 보육이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임.

- 보육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및 관리, 감독이 요구됨.
- 방안
  - 영유아 보육시설의 야간 및 공휴일 운영을 유도함. 공휴일,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대상이며 전국 2,100개동 당 보육교사 1인을 지원함.
  - 지원방법은 해당 기관에 직접 지원하며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 지역부터 운영 유도 및 우선 지원함.

#### ○ 취업모 초등저학년 아동 방과 후 활동 지원

-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집에서 혼자 지내거나(18.8%), 형제나 자매끼리 지내는(17.2%) 아동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서문희외, 2002). 저소득층 초등학교 자녀가 방과후 ‘혼자 지낸다’는 비율이 높음.
- 어린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고 바로 자립이 가능한 것은 아님. 보육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 요구가 높으나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은 17,120명임. 따라서 방과후 보육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방안
  -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 및 농어촌 지역 저학년 아동 방과후 보육을 지원함. 도시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초등 1-3학년 아동이 우선 지원대상임(도시저소득층 비율 25%, 여성 취업률 50%를 적용함).

- 목표치는 2004년 20%에서 2008년 100%임. 방과후 교실 취원 아동 보육료 및 아동 20명당 1인 교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
- 방과후 아동보육은 도입 초기 단계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함.

#### ○ 기업, 공공기관의 참여 유도

- 기업, 공공기관에서의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유도함.
- 부모들의 보육비 전액에 대한 세금공제 실시.
-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이 보육시설 설치 시 손비처리, 자녀 양육비 지원 시 손비 처리, 보육비 전액 세금 공제임.

### ③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확립

#### ○ 교육과 보호 통합 프로그램 제공

- 종일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영유아를 위한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
- 연령별 보육, 방과후 보육, 종일제, 공휴일,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

#### ○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및 자질 제고

- 2002년 현재 보육교사는 50,254명이나 양성과정과 자격관리, 경력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안이 요구됨.

-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이 열악함. 보육교사들은 평일 평균 10.6시간, 주당 평균 59.3시간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44시간 근무보다 15.3시간 초과함. 그러나 월평균 70~90만원 수준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이 시급함.
- 교사 자격제도 도입, 표준보수표 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이 요구됨.
- 방안
  - 보육교사 1, 2, 3급을 두며 1, 2급은 3년제 이상 대학에서 보육 관련 표준교육과정 45/36학점 이상 취득자, 보육교사 3급은 1년 훈련과정 이수자를 기본으로 함.
  - 교사양성과정의 내용으로 영유아 교육 + 보호 표준교육과정 도입
  - 보육교사 보수를 포함한 근무환경을 개선함.

#### ○ 교사 대 유아의 비율 조정(장기 방안)

- 영유아의 연령과 운영시간에 따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수정, 조정함. 희망비율은 1세 미만 1:3, 2세 미만 1: 5, 2세 1:7, 3세 이상 1: 15임.

#### ○ 시설·설비기준을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 보육시설을 현재 허가제에서 인가제 원칙으로 전환하고, 민간 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함.

#### ○ 평가인증제 도입등으로 질 관리 강화

- 보육시설이 2만 개소를 넘고 보육 영유아가 77만 명을 넘고 있으나 이들이 어떤 교사에 의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정부 비지원시설이 83.9%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무함.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시되어야 함.
-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의 관리감독 방안 도입이 요구됨.
- 방안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운영위원회 도입 등으로 관리, 감독 제도를 확립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함.
  - 전담기관(가칭 영유아보육연구원)을 설치하여 보육시설의 교육 강화, 보육시설 컨설팅, 보육시설 평가, 교사양성기관 평가, 교사양성 표준 보육과정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④ 국공립 시설 확충

#### ○ 시설 확충

- 도시 저소득 지역, 농어촌 지역, 장애아 시설을 중심으로 국공립시설을 확충함. 목표치는 최소 현재 국공립 시설에 취원중인 영유아 14.3%를 유지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함.
- 확충방안으로는 국공립 시설 신축을 포함하여 기존의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함.

## ○ 시설 개·보수

- 개원한 지 10년이 지난 시설을 우선으로 시설 개·보수 실시.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 및 법인시설 대상 지원을 계속 (매년 35개 지원)하고 국공립 시설이외에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시설 지원 추진.

## ⑤ 행정체계의 효율화 모색

- 0 - 5세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행정체계의 효율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 유치원에서 3 - 5세 대상 교육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 보육시설에서 0 - 5세 대상 보호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여성부 : 보육정책 조정업무
- 노동부 : 0 - 5세의 직장보육 담당
- 방안
- 유아교육·보육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의 행정체계를 검토, 개선함.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일원화체계 혹은 몇 이원화 협력체계로 통합. 이 경우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 단점이 검토되어야 함.



## 2

# 여성 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여성을 위한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함.
-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여성 일자리를 창출함.

### 가. 취업희망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 ① 상대적으로 여성고용창출 효과가 큰 공공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여성을 위한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

-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창출이 높은 복지서비스, 교육 등 공공서비스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보육서비스부문의 확충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증설함.
  - ※ 증설규모는 연간 2,000개소, 5년간 총 1만개소임. 이러한 보육시설의 확대는 여성 일자리를 연간 10,000개정도 증가.
  - ※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도모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임.

○ **교육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 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에 따라, 향후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육부문에 대한 인력 충원을 확대함.
  -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교사인력수급을 감안하면, 공공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연간 약 1만개의 여성일 자리를 창출해야 함.
  - 특수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사를 확충하면, 여성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사회 및 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함.
  - 여성회관, 복지센터 등의 정보화 기초교육, 초등학교 컴퓨터 교실의 확대함으로서, 정보통신관련 여성전문가에게 강사 및 교사의 기회를 제공.

○ **직업상담 및 가족상담과 관련된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여성 일자리를 창출**

-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로지도와 취업상담과 관련

된 공공서비스 투자를 확대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

-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는 각종 복지서비스 기관을 확대하여 여성 일자리를 창출함.

○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 전체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해 종사자 2교대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1,600명(2003년)의 인력을 확충함.
- 의료취약계층 밀집 대도시에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에 인력 등 증원 등을 통해서 여성 일자리 확대.

**②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s)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발전과 함께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단위의 여성 창업보육센터를 강화하고, 여성 창업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특화 여성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강화

-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1개 지역에 1개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 창업보육센터에서 비즈니스서비스(예컨대, 사업 장소, 컴퓨터, 전화 등 사무기기, 경비 등을 제공함.
- ※ 여성회관 혹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

터를 설치함.

-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희망하면 일정한 수준의 재정 지원.

○ 여성 유망 자영업종을 개발하고, 창업교육을 확대함과 동시에 창업지원정책 확대.

- 여성 창업성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창업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
- 여성창업교육은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실시함.
  - ※ 주요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창업성공률이 상당히 낮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창업성공률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기 위한 창업진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창업 진단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이수한 여성에 대한 저리의 창업자금을 지원.
- 여성창업지원을 위해서 여성을 위한 소액 창업자금 융자제도 및 보증대출프로그램을 시행.

③ 주5일제의 조기 정착에 따른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촉진

○ 주5일제 정착으로 문화·관광·레저산업부문의 여성 일자리 창출.

- 주5일제 정착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

※ 여성 일자리는 약 30만개가 될 것으로 전망. 한국노동연구원(2002)은 주5일제 도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68만개로 예측함.

-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큰 문화·레저분야의 여성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

#### ④ 해외의 좋은 일자리(decent jobs)의 창출과 모색

- 여성을 위한 취업알선망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대
  - 여성 청년층집단을 위한 해외 취업알선망을 강화
  - 여대생의 기업연수 및 인턴제를 해외기업까지 확대 실시함.
    - ※ 임금과 근로환경이 좋은 일자리가 1997년 이후 매년 7만개 정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 결과 고학력 인력공급과 국내 좋은 일자리의 창출간에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임.

#### 나.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인 여성 고용창출

-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들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고, 그 결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 향후 경제성장률이 5~7%로 유지되면 연간 45~60만개, 5년 동안에 225~30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여성 일자리를 115~160만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2001~2002년 평균 고용흡수력을 적용하여 전망한 결과).

### <인력공급구조를 감안한 향후 취업자 목표치>

단위: 천명

		2002년	2007년 (정책목표치)	2002-07 증감률
전체	취업자수	21,884	24,448	2,980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59.4% (61.3%)	62.5% (64.6%)	3.1%p (2.3%p)
남성	취업자수	12,789	13,860	1,388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71.6% (74.1%)	71.6% (74.1%)	0.0%p (0.0%p)
여성	취업자수	9,095	10,588	1,593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47.9% (49.1%)	53.5% (54.8%)	5.6%p (5.7%p)

주: 1)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임.

2) 2007년 자료는 15세 이상 인구는 통계청 전망치, 취업자 수는 현행 인력공급구조 아래에서의 취업자 목표치.

- 결혼·출산으로 인한 여성 생산기능인의 이직을 방지함과 동시에 취업희망 잠재여성인력의 산업인력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인력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함.

## ① 공공부문의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확대

### ○ 공공부문의 여성채용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 여성고용현황에 따른 기관성과급 등 예산 차등 지급
- 여성고용현황 평가 결과를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 반영
- 공기업 여성채용인센티브제도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적용

-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여성고용 연차보고서』(남녀 채용 및 고용현황과 실적, 여성고용개선 계획 및 개선 정도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 연차보고서를 기초로 여성고용현황을 공표하고, 평가함.
  - ※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기업에 대한 여성 고용인센티브제도는 실효성이 거의 없음. 이에 따라 공기업 근로자의 여성비율은 12.3%(2002년)이고, 이러한 비율은 1999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고용평등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 정부부처의 고용평등 현황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 정부부처의 고용평등 현황 평가결과 공표
- 고용평등 평가범주에는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포괄해서 고용평등과 관련된 현황과 계획, 교육 등을 평가함.

## ② 남녀고용평등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남녀고용평등 의무 이행 사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조달계약을 우대하는 국가조달계약 우대제도 도입.
  - 1차적으로 고용평등우수기업에게 정부조달계약에서 일정한 혜택을 부여
  - 2차적으로는 고용평등기업에게만 정부조달계약 입찰 자격을 부여
  - 정부조달계약 체결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관련 법·제도 준수 기

업에 인센티브 제공함.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조달계약 체결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관련 법·제도 준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함.

※ 미국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확보를 위해서 정부계약준수프로그램을 실시함. 이 제도는 노동부의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 사무국(OFCCP)에 의해서 시행됨. OFCCP는 국장 아래에 3개 과 즉,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과, 행정관리개발과가 있음. 또한 8개 지역사무소에 많게는 122명에서 적게는 21명이 있음.

※ 호주: 고용기회평등법을 근거로 평등기회위원회에 의해서 평등의무 준수기업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금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함.

※ 캐나다: 인권위원회, 노동부가 정부조달계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노동부는 고용평등현황을 조사함.

## ○ 남녀고용차별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의 기능 강화

- (1안) 지방조직을 가진 고용평등위원회를 신설함.

• 특정한 행정조직 산하에 독립적인 고용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평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 노동부의 고용평등위원회,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고용평등업무, 인권위원회에서 고용평등업무를 신설한 조직(독립적인 고용평등위원회)에 통합시킴.

• 고용평등위원회는 성별, 장애 유무별, 지역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용차별분쟁을 모두 담당함.

※ [외국의 사례]



미국의 고용평등위원회(EEOC)는 본부와 50개의 현장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연간 8만건의 고발을 접수함.

캐나다의 인권위원회(CHRC), 영국의 고용평등위원회(EOC) 등도 상근 직원을 두고 고용차별과 관련된 분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안) 기존의 고용평등과 관련된 위원회를 강화함.

-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에 상임위원 배치와 고용평등상담실과의 연계 관계 강화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4개 지방차별개선사무소(부산, 대전, 광주, 대구) 설치

- ※ 지역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차별분쟁에 대한 접수와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

### ③ 여성 노동공급 저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

- 중소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보육서비스 및 세제 혜택

- 중소 제조업 종사 기혼 여성근로자에게 거주지 인근에 있는 공공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 부여 및 이용료 10% 할인 혜택 부여

- 중소 제조업 종사 기혼 여성근로자에게 소득세의 자녀양육비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50만원→100만원)함.

- 정보통신, 핵심 문화콘텐츠 업종에 속하는 여성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정보통신, 핵심 문화콘텐츠 업종에 속하는 여성기업인에 대한 자금융자,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

- 정보통신, 핵심 문화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여성인력 양성에 대한 훈련투자를 확대함.
  - 공연예술, 영화산업, 게임산업 등 문화컨텐츠 산업에 필요한 여성인력 양성을 통해서 여성취업을 촉진함.
    - ※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규모: 2000-10년 사이 14만개 일자리 창출
  - 여성인력의 배출규모가 많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를 위한 정보통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

# 3

##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 장·차관 및 관리직 공무원, 공기업, 교육 등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 정치개혁을 통한 여성대표성 확대

### 가. 공공부문

#### ① 장·차관급 등 고위 임명직에 여성 30% 임명

- 국가공무원법에 장·차관급 등 고위임명직에 여성 30% 할당제 도입
- 임기 첫해에 장·차관급 등 고위임명직에 여성 30% 임명하여 노무현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대·내외 천명
  - ※ 2001년 12월 현재: 장관급 45명중 여성장관 2인(4.4%), 차관급 79명중 여성 2인(2.5%)로 극히 낮음.

- 가급적 핵심부처 또는 여성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처에 임명
- 고위 외교직(대사, 공사 등)에 여성임명 확대

## ② 여성관리직 공무원(5급이상) 20%로 확대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 정부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 2003년부터 채용, 선발예정 인원 5명이상 시험단위 대상으로 하는 직렬공채시험에 있어 남성과 여성 중 한쪽 성의 합격비율이 최소 30%이상 되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극 실시. 이 목표제는 교정직 등 일부 직렬이 제외되는데, 여성의 경우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등 기술직 군에 공직진출이 확대 예상됨.
-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 2006년까지 실시될 예정인 여성관리직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되, 여성인적자원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재검토하여 장기적으로는 20%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구분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비율	5.5%	5.5%	6.5%	6.4%	7.5%	6.9%	8.7%	7.8%	10.0%	10.4%

※ 2001년 12월 현재 5급이상 일반직 여성분포 비율은 3.8%임.

○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 도입 검토

- 여성관리직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06년부터 모든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0% 이상 승진 임용되도록 하는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 도입 검토
- ※ 2001년 현재 일반직 6급의 경우, 여성은 총 65,294명 중 6,183명 (9.5%) 수준임.

○ 개방형직제의 확대 및 30% 여성채용 의무화제 도입

- 현행 중앙부처의 2-3급 실·국장 채용에 사용하는 개방형직을 중앙 및 지방의 2-3급 실·국장 및 4급 과장에 확대 적용하고, 중앙인사위, 행자부가 중심이 되어 30% 여성채용 의무화제 도입.

○ 4급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권장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2-3급 실·국장 및 4급 이상 과장급에 ‘1기관 1명 이상’ 여성공무원이 배치되도록 공무원인사관리지침 등에 내용을 반영하여 임용확대 권장 및 이행독려

<표 2> 여성공무원 고위직 임용현황

(2002.12월말 현재)

구 분		총 기관수	국장급 이상 확보 기관수(비율)	과장급 확보기관수(비율)
중앙부처		53	9(17%)	22(42%)
자치 단체	소계	248	58(23%)	212(85%)
	광역	16	8(50%)	16(100%)
	기초	232	50(22%)	196(85%)

자료: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

### ③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여성임명 확대

- 지방자치단체에 부단체장이 2인 이상인 경우 1명은 여성으로 의무화함(지방공무원법에 명시)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항목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유도

※ 광역자치단체 여성임용은 전체 16개 단체중 0개 단체 기초단체 여성 부단체장 임용은 전체 232개 단체중 1개 단체임.

### ④ 공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 ‘공기업 여성관리직채용목표제’의 도입

- 2006년까지 공기업 여성관리직채용목표비율(10%)의 달성

※ 투자기관에서 관리직으로 볼 수 있는 부장급(3직급) 이상인 직원 중 여성비율은 1.3%에 그침. 민간기업의 경우 2001년도 부장급의 여성비율이 5.6%로서 공기업에서 여성관리직 진출이 저조함.

<표> 공기업의 직급별 여성비율(2002년 4월)

단위: %

	임원	직 원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5직급	6직급 이하	기능직	임시/별정·연구직	합계
투자기관	0.0	0.0	0.2	1.1	3.6	14.9	4.9	5.4	45.6	9.7
출자기관	1.4	0.2	0.9	2.6	8.3	18.2	19.8	45.5	20.2	14.9

출처: 여성부 국정감사 자료(2002년)

- 공기업 여성 승진대상자 풀의 확보
- 기획조정실, 예산실 등 핵심부서의 여성임용 확대 권장
- 공기업 여성인력위원회 등 기업내 다양한 조치를 기획·추진·평가할 책임부서의 설치 의무화

#### ○ 공기업 여성관리직 채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도입

-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여성인력활용개선’ 추가
- ‘공기업 고용평등 지표’의 개발
  - ※ 항목은 여성근로자 비율, 직급별 분포, 신규채용인력중 여성비율, 가정·직장병존조치의 도입률, 각 항목들의 전년대비 증가율 등이 될 수 있음.
- 공기업의 고용평등 현황 평가결과 공표
- 여성고용현황에 따른 기관성과급 등 예산 차등 지급
- 여성고용현황 평가 결과를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 반영
- ‘여성고용 우수 공기업상’ 제정 및 수상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부여
- 여성고용 우수 공기업 사례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홍보

### ⑤ 교육분야 여성고위직 진출 촉진

#### ○ 여교장·여교감비율의 상향을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

- 2002년 현재 비율을 2007년까지 단계별로 상향화

<표> 2002년 국공립학교 여교장·여교감 비율

	여교장	여교감
초등학교	6.8%	10.9%
중 학교	11.3%	13.3%
고등학교	5.6%	4.6%

- 교감 및 교장 자격연수자중 일정비율 여성 할당:20%미만인 지역 특별관리
- 시도교육청 평가항목 비중 상향화
- 시도교육청별 인사관리 지침 개선을 통한 승진후보명부 3배수 중 여성 우선 발령 실시
- 교원승진 및 근평제도의 개선

○ 교육장 및 교육청 보직 임명시 여성 비율 할당

- 지방교육청내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교육장 및 교육청 보직 임명시 여성비율 할당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적극 권고
- 2002년 현재 5.6%인 여성교육장 비율(180명중 10명)과 8.2% (861명중 71명)인 여성장학관 비율을 2007년까지 각각 15%와 20%까지 상향조정

<표> 2002년 여성 교육전문직 현황

전체	장학사	장학관	교육장
18%	20.9%	8.2%	5.6%



## 나. 정치개혁

### 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 및 여성의 대표성 제고

- 국회의원, 광역의회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회 1인 여성당선보장제 선거제도 도입

- 국회의원 선거구제

- 1안) 시·도 단위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대선거구제 정당명 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 2안) 시·도단위별 2인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 대표제에 50% 이상 여성공천할당제(홀·짝수의무제) 도입

- 지방의회 선거구제

- 광역의회 선거구제 :

- 시·도 단위별로 인구수에 따른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 도입 및 50%이상 여성 공천할당제 도입

- 기초의회 선거구제 :

- 1안) 정당공천 배제하고, 2개 동을 한 선거구로 하여 유권자가 여성 1명, 남성 1명을 선출하는 1인 2표제 방식 채택

- 2안) 시·군·구 단위별로 한 개 선거구역으로 하여 당선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 도입

### ② 정당구조의 개편에 따른 여성대표성 확대방안

- 중앙당의 개편에 따른 독립된 여성조직 설치

- 총재 직속의 독립된 여성정책전담기구 설치

- 정당의 중앙의 주요당직에 여성 30% 할당제 도입
  - 사무총장 및 부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국회상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에 성균형화 정책 도입
  - 부총재, 당무위원, 자문위원, 정책위원회 및 각종위원회 임원 등의 주요당직에 여성할당 30% 제도적으로 보장
  - 공천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제도 도입
  - 중앙당 사무처 여성당직자에 대한 채용, 배치 및 승진할당제 도입
  
- 현존 지구당의 지역구협의회로 개편에 따른 공동대표, 임원 등에 있어 일정비율 여성할당제 도입
  - 지역구협의회 공동대표, 후보선출 위원, 운영위원 등에 30% 여성할당제 도입
  - 지역구협의회 대의원 중 50% 여성할당제 도입

### ③ 공천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

- 중앙당 차원에서 우수한 여성후보 확보한 후 지역구협의회 요청 시 추천하여, 승인받는 제도 도입(정당법에 명시)
  
- 시·군·구 지역구협의회에서의 후보 복수추천제 의무화 및 여성후보가 있을 시 우선 공천하도록 하는 여성후보 1인 추천의무제 도입(정당법에 명시)

-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30% 여성위원 할당 보장
- 시·군·구 지역구협의회 후보선정 위원회에 여성위원 30%이상 할당 보장

#### ④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구 30% 후보공천할당, 비례대표제 50% 공천할당을 이행 방안.

-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도입 및 불이행시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
  -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2015년까지 30%이상을 목표로 단계별(예: 총선 2004년 10%이상, 2008년 15%이상, 2012년 20%이상, 2016년 30%이상, 지방선거: 2006년 15%이상, 2010년 20%이상, 2014년 30%) 지역구 여성후보공천할당제 도입 및 불이행 시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 50% 까지 삭감(정당법에 명시)
  -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후보공천할당제 50%로 상향 조정 및 불이행 시 선관위에서 접수 불허(정당법에 명시)

#### ⑤ 여성정치인 육성 기금 설치

- 정부 부처에 여성정치인 육성기금 설치하여 여성정치인 육성기금으로 활용

- 정부 부처에 여성정치인 육성기금 설치하여, 심사 후 개인, 단체, 정당의 여성후보 지원, 교육훈련, 공약개발비 등으로 사용.

## 6 여성청년층에 대한 인턴제도의 확립

- 정당, 국회 등에서의 인턴으로 실습하는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제 도입
  - 교육부와 대학과 연계하여 여대생이 정당, 국회에서 인턴으로 실습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마련
-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여대생 대상 장학제도 마련

## 7 여성당원 및 당직자에 대한 통계 산출 의무화

- 정당, 중앙선관위에 당직자 뿐 아니라 당원, 유권자 관련 통계에 성별 현황 산출 의무화 함.

## 제2부. 주요과제

## 4

#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제고

- 지식기반산업 분야로의 여성진출 촉진
- 다양한 여성집단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 여성인적자원 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

### ① 지식기반산업분야로의 여성진출 촉진

#### ○ 여성인적자원 양성의 다변화

- 그동안의 여성인력이 인문사회계열 중심으로 양성되어 노동시장의 수요와 불일치현상이 높았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진입 유도 및 교육의 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연과학분야중 공과분야는 남성중심적 전공으로 인식되어 이 분야 여성인력양성이 매우 저조함.
- 학사단계에서 다른 계열의 여성 비율은 대부분 절반을 넘고 있고 이학계열 역시 51.4%이나, 공학계열은 18.7%에 머뭄. 석

사단계에서도 공학계열만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박사 중 여성비율도 5.6%로 극소수에 머뭄.

- 지역별로 여성공학교육 선도학교(EEWFS : Engineering Education for Women Frontier School)를 지정·육성하여 여성들의 기술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학분야로의 여성인력 유도가 요구됨.

#### <외국 공과대학의 여학생 진입유도 및 질제고 사례>

##### □ 미국

- 워싱턴 대학: Global E<sup>3</sup>(Global Engineering Education Exchange)  
여자 공대생들이 여름학기나 정기학기 중 다른 나라 대학에서 공학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아울러 학점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개 이상의 대학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공학대학의 여학생들이 다른 나라에서 공학을 배울 수 있고 동시에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도 같이 습득할 수 있어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을 갖춘 공학 전문가로 훈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미시건 대학: ‘대학원경험프로젝트’(Graduate Experience Project)  
대학원 과정 여학생의 교육과정과 경험에 대해 연구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공과대학을 좀 더 여성 친화적인 환경으로 구축하는데 목적을 둠.
- 메릴랜드 대학: ‘공학교육과정 변화프로젝트’  
공과대학 교육과정에 여성, 인종, 계급 문제 등을 포함시키고, 동시에 교수 방법의 변환도 시도하고 있다. 이 새로운 교육과정은 공대의 남성 중심의 문화와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함.

##### □ 호주지역

##### - 모나쉬 대학

본부와 공과대학 내에 여성을 포함한 소수그룹의 평등과 공정향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특별히 ‘여성공학프로젝트담당자’를 임명하여 남성 지배적인 분야를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감.

- RMIT 대학

공학분야 여성교육프로그램(WIE)을 실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러한 기구의 주도 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학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학분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꾀하고 있음.

- 국가전략분야(NT, ST, BT, CT, ET 등) 육성프로그램의 여성 일정비율 할당
- 인문사회계열 분야 전공자를 위한 IT 분야 교육 확대

○ 여성인적자원의 질제고를 통한 핵심인력화

-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함에 있어 제조업분야는 인력수요가 감소하고 서비스부분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분야로의 여성인력의 고급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인력수요가 증가하게 될 금융·보험, 기업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에 여성인력을 전문직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영상산업 등 신종 문화사업영역에 여성의 핵심인력화를 위한 지원
  - 지역의 여성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화사업영역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이 필요함.
- 여성유망직종에 관한 정보자료의 주기적 갱신 및 보급



### ○ 여성의 창업지원 확대

- 현재 영세규모인 여성창업이 다양화·활성화되도록 신산업·지식집약적 창업분야 발굴
- 여성에게 적합한 창업 업종의 개발 및 보급
- 여성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여성예비 창업자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대상별 프로그램 및 창업전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실업계 여학생에 대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여학생의 진로 다양화 기반 조성

- 여학생의 진로다양화유도를 위한 초·중고 교사 연수 정례화
- 지역교육청별로 ‘여학생 진로다양화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도록 지원
- 대중매체 및 정기적 여성직업박람회를 통한 다양한 여성직업군 홍보

## ② 다양한 여성집단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 ○ 고학력 여성의 활용 활성화

- 현재 남녀공학대학중 여학생지원을 위한 별도기구가 있는 대학은 8개 대학 정도에 불과하며, 인원과 예산 등에 있어서 열악한 상태여서 여학생들의 커리어개발을 지원하고 있지 못함.
- 대학내 취업정보실이나 학생생활연구소 또한 그 기능이 열악하

여 여학생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 못함.

- 여대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 기능 강화: 여대생들의 커리어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녀공학대학내 지원센터 설치
- 대학의 교양과정으로 진로 및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교과목을 계열의 특성에 맞게 개설하고 모든 학생들의 이수를 의무화함.
- 현재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는 광역자치 단체하의 여성회관들과 여성부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음.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저학력위주의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되며 전문적인 취업상담창구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 ‘고학력 여성을 위한 원스톱여성취업센터’ 설치
  - 광역자치단체별로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고학력여성을 위한 여성인적자원개발 거점센터(Headquarter)를 지정, 집중 육성. 여성들이 이곳에서 정보제공과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관련분야 취업을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기관으로 지원 및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2003년도 3개 지역 시범실시-> 2007년까지 10개소로 확대
- 국공립대학 여교수 채용목표제 조기 시행 및 실적 평가
  - 국공립 대학 여교수 채용목표제 조기 시행 및 실적 평가 도입, 향후 교수정원 배정시 여성비율 할당
  - 2002년도 교육공무원법 입법예고, 2003년도 관련 법 시행령 제정 및 관련 평가위원회 설치

<표> 일반 4년제 대학의 남녀교수 구성비 변화

단위 :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전 체	9.5	10.2	10.9	12.2	11.8	12.4	13.7	14.1
국공립	2.7	3.5	5.3	8.1	8.0	8.0	8.5	8.8
사 립	13.5	13.9	13.8	14.2	13.6	14.2	15.7	16.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 이·공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여성채용목표제 시행실적 모니터링과 채용실적 연차 상향조정

#### - 현황

- 2001년 11월 말 현재 기준 21개 과학기술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여성연구원 현황을 보면, 정규직 연구원 5,575명중 여성은 419명으로 7.5%에 머뭇.
- 직급별로 보면, 책임급 1,972명중 55명(2.8%), 선임급 2,533명중 197명(7.8%), 원급 1,070명중 167명(15.6%)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연구원의 비율이 감소함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에는 여성연구원이 9.9%,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연구원은 3.6%,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0.7% 과기부 산하 3.4%에 머뭇.

#### ○ 재직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재직여성근로자의 직종전환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식기반사회에서 직무환경의 신속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직여성근로자의 정보화 능력 등 교육훈련 참여제고

- 고용보험법상의 유급 휴가·훈련제도의 활성화
-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 ○ 전업주부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주 5일제 근무제 확산으로 전업주부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 됨.
- 각 지역의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지원 확대를 통하여 전업주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
- 지역의 각종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에 학습동아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함으로써 전업주부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 이수 후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
- 사이버 대학 등 원격교육기관의 입학전형시 전업주부에 대한 정원의 할당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 가사와 육아로 교육시간의 활용이 자유롭지 못한 전업주부들을 위하여 사이버교육기회의 확대 필요

#### ○ 취약계층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현재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프로그램은 성인여성 위주이며, 미진학 청소년들이 저렴한 교육비로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미진학 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하도록 지원체제 구축
- 노인여성의 직종개발을 통한 일감맞기 사업 지원
- 각종 교육기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장애여성들의 정보 능력 제고를 위하여 방문정보화교육 사업 활성화

※ 2002년 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2002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22.4%로 국민전체 이용률 평균 6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어촌여성 정보화교육 집중 실시

※ 2000년 6월 조사에 의하면, 농어업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4.5%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농어촌여성은 이보다도 더 낮을 것임.

### ③ 여성인적자원 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

####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실효화

- 육아휴직시 현행 30만원 지급으로는 보존이 미흡하므로 향후 임금의 40%까지 보존하는 방안 추진
  - 육아휴직기간을 부부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향후 증가하게 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대비하고 실효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체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구축을 통한 인력뱅크 구축

○ 여성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

- 여성인적자원 흐름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조사 및 패널자료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 계획 수립

※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각급 학교단계별 졸업자에 대한 정기적 추적조사를 통하여 인력흐름을 파악, 관리함. 또한 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별도의 종단적조사(NLSW)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각 부처별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정책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시를 통한 효율성 제고

## 5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

-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 비정규직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능력개발과 경력개발을 지원

### 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규 정비

-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고용형태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 제 5조 규정을 개정 혹은 성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법제를 마련
- 근로감독관이 고용형태에 따른 동일가치노동 임금차별을 점검할 수 있는 행정지침을 마련함.

- 특수고용 취업자를 위한 법제 정비
  - 비정규직 내에서 23.5%를 차지하는 캐디,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무엇보다도 임금교섭에 있어 사용자와의 교섭이 불가능한 점등의 개선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특수고용 취업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자에 준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여 근로기준법의 임금, 퇴직금, 해고제한 등에 대한 조항 및 산재보험 적용방안 검토
- 파견제근로자에 대한 법제 정비
  - 파견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균등한 처우’에 별칙 규정 마련

#### ○ 여성비정규직 보호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 명목 비정규직 근절을 위한 행정 지도 강화 및 비정규직 근로자용 자가점검표 개발 및 보급
- 전체 임금근로자의 27% 수준에 달하는 법적으로는 정규직근로자 이면서 기업내 신분과 처우를 달리 하는 명목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
- 휴일 및 휴가제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제도, 퇴직금제도, 해고와 관련된 법규 적용 현황, 모성보호제도,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명목 비정규직에 대한 자가점검표를 마련하여 개별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



- 비정규직의 부가급여와 관련된 행정지침 마련
  - 수당, 교통비, 식사비와 같은 복리후생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어야 함.

<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단위 : 천명, %

	전체		남성		여성		여성 비율
	근로자수	구성비	근로자수	구성비	근로자수	구성비	
정규직	5,850	44.3	4,295	54.6	1,555	29.1	26.6
명목 비정규직	3,529	26.7	1,740	22.1	1,790	33.5	50.7
실질 비정규직	3,836	29.0	1,838	23.3	1,998	37.4	52.1

자료 : 통계청(2001.8), 『경제활동인구연보』, 원자료

-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실시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도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에의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이나 고용계약기간 등에 대한 지침 마련
  -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서 고용보험가입 6개월 이상의 지급 요건 완화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실시여부 감시·감독
  - 비정규직 여성에게 모성보호제도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비정규직 여성에게까지 모성보호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 감시·감독을 위한 근로감독관 수 증가
  - 명예감독관 제도 도입 :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내 명예

감독관을 두어 고용환경감독

-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교육과 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각종 인센티브 부여
- 명예감독관에게 근로감독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 부여
- 행정지도와 홍보 강화
- 명목 비정규직과 관련된 행정지도 강화와 관련하여 기업이 명목 비정규직과 관련된 위법 사례를 인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법 사례를 수집·배포

## ②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확대

### ○ 고용보험의 가입 확대

- 고용보험을 통한 일용직 여성근로자 보호
-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 제외 항목 삭제 검토
- 고용보험에 명시되어 있는 1주 18시간에 대해 범위변경 검토

###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확대

-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제외되고 있는 업체에까지 확대 적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거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의 비정규 근로자에 건강보험 확대적용
-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제외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 적용
-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에 가입 자격 허용 검토

○ 산업재해보험의 가입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특수고용 근로자 등의 가입 가능성 검토
- 특수고용 취업자 중에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 국민연금의 가입 확대

- 3개월 미만 고용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추진
- 국민연금가입 당연적용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3개월 미만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추진

○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을 제고

-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및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제고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미신고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가입토록 조치하는 한편, 자발적인 사업장 가입 촉진을 위하여 노·사 계도 및 홍보 강화

### ③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 및 경력개발 지원

#### ○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교육

- 저학력, 고연령층 등 정규직을 원하지만 직업능력이 떨어지는 여성들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 교육 실시
- 비정규직 대상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교육훈련 기간 동안 생계지원금 보조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할 전문기관 지정
- 여성부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 내 비정규직여성 대상 직업훈련 사업 실시

####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경력개발 지원

- 비정규직에서의 경력인정제도 도입
-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존의 근속연수 및 고시경력인정 제도 마련
- 현재 단순 구인구직 알선에 머물고 있는 직업상담에서 탈피하여 비정규직 여성의 경력관리를 위한 심층상담 실시
- 명예상담원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등에서 전문상담

####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제도 마련

- 고용계약이 3년 이상 계속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근로자의 전환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취업시켰다가,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임금보조금 지원 및 사회보장관련 비용 면제
-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관리를 개선한 사업주에게 고용관리개선 장려금 지급
-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채용에 대한 우대제도 실시
- 정규직근로자 모집시 현재 동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모집과 관련된 정보제공
- 정보를 제공받은 비정규직근로자가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응모할 수 있는 기회 우선 제공

## 6

# 성매매 방지

- 성매매 관련 법 정비
- 빗·감금·인신매매 등 성매매 구조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청소년성매매 확산 방지

### 1 성매매 관련 법 정비

- 성매매는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의 증감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닌, 성매매 알선 및 매개구조의 측면, 공급의 측면(여성), 수요의 측면(남성)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임.
-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이나 사회·문화의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음.

○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력과 집행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정비함.

-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윤락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사문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2002년 9월 10일에 새천년민주당의 조배숙의원외에 86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성매매방지법이 발의된 상태임. 현재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3년 2월 14일에 1차 회의를 가진 상황임.
- 제안된 법안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분리되어 제안되었음.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 ① 성매매행위, 성매매된자의 개념,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행위 등에 대한 개념적용의 폭을 확대함.
- ②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처벌에서 보호사건으로의 처리, 성매매행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연락금지,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등으로 처벌유형을 다양화했으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의 경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처벌조항을 신설함.
- ③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중간매개자는 중형으로 처벌하여 형량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 수준으로 상향조정함.
- ④ 성매매강요, 알선, 광고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물품에 대해 몰수·추징제도를 신설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채무관계는 계약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효가 되도록 함.

- ⑤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매매 강요,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자 등은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② 일시지원시설, 중장기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재활지원센터 등의 지원시설 및 성매매 관련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함.
- ③ 외국인 성매매된 여성에 대한 규정을 별도 설치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함.

- 성매매 문제에 대한 법적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과 함께 성매매 구조에서 이뤄지는 인신매매, 감금, 알선 및 착취 등에 대한 처벌, 성매매 구매 남성에 대한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의 조치 다양화, 외국인 성매매 등 성매매 변화양상 반영하는 보호체계 및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하는 재활프로그램 강화 등에 초점 두어야 함.

## ② 빗, 감금, 인신매매 등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탈성매매 지원 및 보호 강화

- 불법채권무효 조항 적용의 현실화를 위한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 불법채무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빚의 고리는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주요요인 중 하나임.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수적인데, 성매매 문제의 특성상 민사와 형사사건이 얹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함.
- 무료법률구조사업을 보다 확대·강화하고, 법률지원과 관련된 비용 지원을 위해 성매매 관련 범칙금으로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법률지원기금을 마련하도록 해야함.

#### ○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 기존의 25개 선도보호시설 등은 10대 가출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탈성매매 여성 수도 많지 않았던 것에서 연유하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탈성매매 여성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03년도에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사업을 2개 시설에서 시범사업형태로 실시할 예정에 있고, 6개 현장상담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에 있음.
- 2003년도에 외국인 성매매여성 보호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이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16개소)에 동시통역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음.
- 국내외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도되는 현장상담소나 자립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상담·이동상담·사이버상담 등을 통한 성매매 전문 종합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함.

-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심리·정서적 치료, 대안교육, 자활·자립공동체, 생업자금 투자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 소규모 가족공동체 형태의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 탈성매매 여성의 상담원 양성 및 활용
- 2003년부터 선도보호시설 입소 탈성매매 여성에게 적용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을 시설 입소 탈성매매 여성 뿐 아니라 재가상태에 있는 여성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해야함.

※ [외국의 사례]

- 샌프란시스코의 SAGE는 성매매 현장 근처에 성매매 여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현장센터를 설치, 현장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탈성매매 여성들을 현장상담을 위한 상담원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음.
- 캐나다의 PACE, 미국의 SAGE, 대만의 경우 기술훈련에 대한 1대1 지원, 직업의식 교육, 창업교육, 창업대출, 사업장 전세금 보조, 성병방지상담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 성매매, 인신매매 수사 관계자의 성매매 대응력 제고

- 성매매 문제 처리과정에서 검·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인식과 대응력을 제고해야함.
- 성매매는 그 구조안에서 빗에 의해 1종→2종→3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볼 때 인신매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연속선상에서 접근할 필요 있음.
- 수사관계자의 성매매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경기동수사반,

여성상담실의 성매매 대응력 강화, 불법채무관계·감금·인신매매 등에 대한 일선 수사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 신설 등을 통해 성매매 수사에 대한 인식 및 대응력을 제고해야함.

### ③ 성매매 알선 업소 확대 억제

#### ○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 특정지역에서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쇠락해 가는 경향이 보이는 반면, 다른 목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음성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업소형 성매매의 경우 업소 수의 증가와 함께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규제완화조치와 함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업소가 증가한 측면도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성매매 알선 업소가 급속히 팽창하는 것은 성매매 알선 등이라는 탈법적 행위를 통한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임.
- 따라서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성매매 알선 업소의 탈법적 수익구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되어야함.

#### ○ 업소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관련 법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 식품위생법이나 공중관리법의 경우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업소안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큰 비중을 차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일관된 처벌수위가 형성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관련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법의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거나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적용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일관된 법적용 이뤄지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 업소내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행정력 부족, 단속요건 적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하여 경찰과 일선 공무원들의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주거지역, 학교 인근지역까지 성매매 알선 업소들이 침투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의 업소밀집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행정 관리·감독 차원의 수시단속, 검·경 합동의 단속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학교보건법의 유해업소에 대한 거리규정, 청소년보호법의 Red Zone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관련 법 및 사례]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9조 3에 근거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청소년

- 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등
- 고양시의 경우 유해업소 밀집지역(화정동, 대화동, 백석동, 탄현동 등)에 대해 특별관리구역(법에 근거한 고시는 아님)을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함.

#### □ 4 청소년성매매 확산 방지

##### ○ 가출로 인한 성매매 유입 차단

- 성매매로의 유입경로를 보면 가출에서 시작해서 숙식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또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성매매가 이뤄지므로 이들의 성매매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이 필요함.
- 가출로 인한 성매매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현장상담, 쉼터(drop in center) 확대, 가출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센터 설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유해환경감시단 등을 통해 성매매 유입 연결고리인 사이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함.

##### ○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강화

-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나 선도보호시설 등에서 성매매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함. 많은 경우 장기적인 가출로 인해 학력이 낮고,

성에 대해선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으며, 심신이 피폐한 상태에 있음.

- 성매매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시설 확충, 대안학교, 사회적·심리적 재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함.

#### ○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신상공개는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으므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을 산 남성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함.

#### ○ 청소년보호를 위한 가족지원 확대

- 문제 청소년의 많은 경우가 가족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이에 청소년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위한 가족의 청소년보호기능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안정성을 제고하여 청소년성매매 문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여성빈곤 해소

-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들의 수급권을 확대하고, 경로연금의 급여를 상향조정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능을 강화함.
- 저소득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함

### ① 여성빈곤예방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강화

-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여성빈곤문제 해소 없이는 우리 사회 빈곤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임. 특히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의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이들의 빈곤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통계청 도시간계조사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성별 빈곤율이 근로자가구의 경우 남성 5.83%, 여성 15.62%이며, 비근로자 가구는 남성 28.85%, 여성 41.22%임(1999년 3/4분기 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월평균임금은 여성이 116만원, 남성이 185만원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58.1%가 여성임 (2001년).

-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2000년 현재 전체 가구의 18.5%이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33.8%, 40대와 50대가 각각 19.3%와 17.2%를 차지함.

#### ○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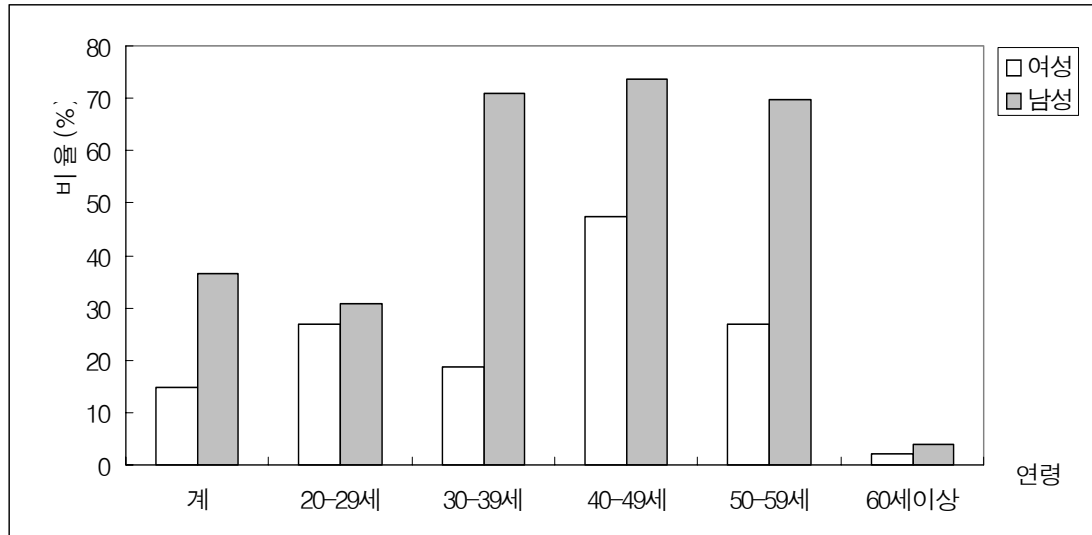
- 여성의 빈곤문제를 예방하고, 빈곤여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들의 사회보장권을 확대하고, 공공부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모자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함. 아울러 연령, 소득계층, 지역, 장애, 교육수준 등 여성들의 다양한 특성에 보다 적합한 구체적인 복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1999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전국민연금시대를 맞게 되었음. 그러나 사회보험의 확충과 내실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사회보험제도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2000년 현재 여성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27.7%, 전체 수급자의 40.8%, 전체 수급액의 17.4%를 차지하는데 불과함. 향후 5년간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통계청이 2000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사회보험 가입 및 휴가



등의 적용률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며. 현재 사회보험 (국민연금·직장의보·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74~91%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2~25%밖에 되지 않음.

-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전업주부, 학생 등 무소득자와 5인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일용직 등은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남성부양자 중심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특히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및 국민연금제도에의 반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책임성에 기반한 보편적 노후 소득보장 기제로서의 연금제도 재정립을 추진해야 함.
- 전체 여성인구대비 국민연금 여성가입자 비율은 14.7%인 반면 남성비율은 36.5%로 남성비율이 2배가 높음. 그러나 전체 여성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수급자 비율은 3.4%이고 남성은 2.5%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즉 여성은 공적 연금제도로서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남성보다 낮고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은 남성보다 높아서 빈곤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전체 여성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이 높아 여성노인집단들의 빈곤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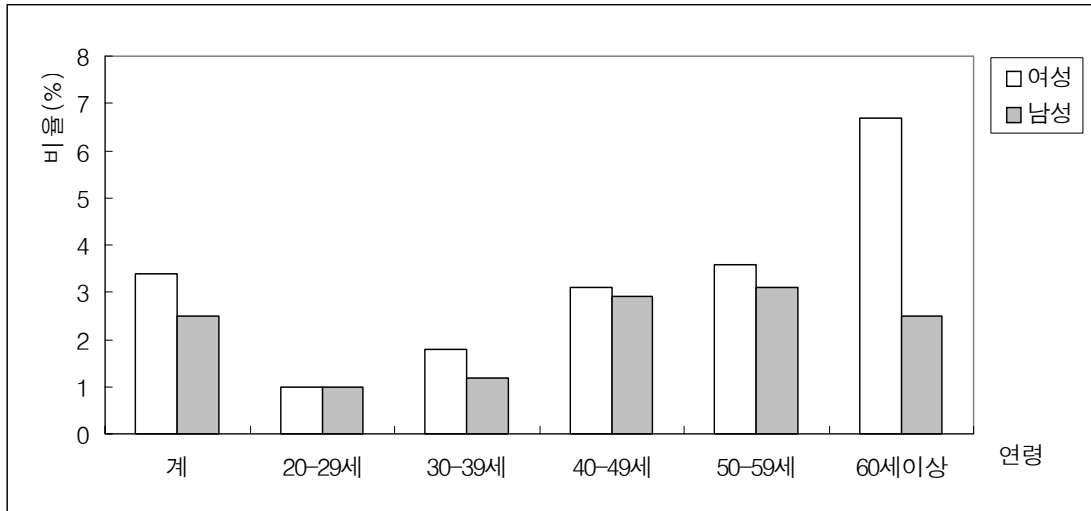
<그림> 성별 국민연금 가입현황(2001)



- 국민연금의 여성수급권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함.
- 국민연금의 여성가입기회에 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주부 및 당연적용에서 제외된 여성들의 국민연금가입을 확대시켜나감.
- 비정규직 등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여성들의 연금가입권 확대
- 장기적인 인구변화 및 경제전망을 통해서 현행 연금제도의 주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여성들의 개별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이혼 후 재혼시에도 연금분할 가능하도록 함.
- 유족 연금과 노령연금의 병급급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빈곤여성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실효성 제고

<그림>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200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함.
  - 여성의 생산적 역할과 재생산적 역할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 운영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실효성을 제고함.
  - 여성빈곤실태에 기반한 ‘기초생활’ 개념의 재정립
  - 빈곤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프로그램 개발
  - 빈곤여성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 주거에 대한 기초보장 확대
  -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문제 개선
- 또한 지역사회내 자원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의 참여

를 확대하며 자활사업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다양한 자활 사업을 개발해야함. 자활사업 담당 실무자의 역량 강화 및 성인지력 향상 훈련(gender training)이 필요하고, 전국 자활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며 자활사업참여여성들을 위한 사례관리 인력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함.

#### ○ 빈곤여성노인을 위한 경로연금제도의 확대

- 최근 신빈곤층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성노인들의 경우 심리적 소외문제,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 소득단절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생애를 통해 경험한 성차별로 인해 노후의 빈곤문제가 야기되는 경향이 있음.
- 빈곤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 여성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연금제도를 개선해야함. 이를 위해서 수급연령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 재산기준을 차등화하며, 경로연금 급여수준을 제고할 필요 있음.

## ② 여성가주주의 탈빈곤을 위한 지원 확대

- 지난 30년간의 추이를 볼 때 생활보호가구에 있어서 여성가주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주주가 남성가주주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음. 특히 모자가정의 여성가주주

와 혼자 사는 여성노인들은 빈곤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임.

#### ○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립기회 확대

- 성별 가구주 분포의 변화가 있어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아동을 단독으로 양육하는 여성가구주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 우리 나라 가구주의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1999년 3/4분기 현재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28.8%, 남성은 14.9%로 여성가구가 남성가구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은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 가구주의 평균 소득은 남성 가구주의 36.8%에 불과하며, 여성가구주의 60% 가량이 공공 부조 소득 기준보다 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일반 한부모가정은 전체 가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세대는 약 7%임. 한부모가정의 여성가구주는 대다수가 본인의 건강문제, 자녀양육과 취업병행의 어려움 등으로 소득과 주거가 불안정함.
-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은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여성가구주와 자녀에 대한 심리적 지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실효성 제고, 건강증진 대책 마련, 주거문제해결 등 다양한 지원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나감.
- 여성가구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가구의 취업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며 창업희망 여성가구에 대한 생업자금융자제도를 개선해야 함

○ 여성가구의 자녀양육지원 강화

- 여성가구들은 생계부양자로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함. 따라서 저소득 여성가구의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여성가구의 보육비 및 학비 지원을 확대하며 모자보호시설 및 주거보장을 강화하여 자립을 지원함.

## 가족정책

- 양성평등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여성의 가족내의 삶을 민주화함.
- 어린이보육과 노인부양 등 여성의 가사노동을 통해 사적으로 수행되는 보호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공성을 제고시킴.
- 가족관계의 개선과 성평등한 가족문화 구축을 위한 가족상담소 등의 운영을 지원함.
- 가족정책 수행의 기술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 ① 가족관련 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 ○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및 호적제도 개선

- 방향: 현행 민법의 호주제 관련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남녀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을 고무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생활침해적 요소를 완화하거나 제거해야 할 것임.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조치 강화
- 호적제도 개선
- 일인일적제
- 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토론공간 활성화를 거쳐 개선.
- 추진체계 : 법무부와의 협조.

#### ○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 방향: 가족내 평등의 기본조건은 부부의 평등한 경제력에 있음. 따라서 부부공동재산제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
- 현실: 현재 집의 명의는 남편이 76.2%, 부인이 12.2%, 부부공동이 3.0%(한국여성의전화연합 조사, 2000). 현재 공동명의화할 때 취득세는 2%, 등록세는 3%.
- 정책: 부부공동의 명의로 변경시 취득세에 대해서는 면세,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세를 유도함. 그러나 단계적인 접근법이 필요. 일차적으로는 자녀부양비 징수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회적 인식변화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임.

#### ○ 이혼부양료(자녀부양비) 징수제도 설립 기반 마련

- 방향: 이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여성과 그들이 돌보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보호장치는 매우 취약.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토록 함.
- 현실: 현재 이혼한 여성중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78%에 달하며, 그 중에서 남편의 경제적 무능이 이유인 경



우는 43%에 불과함(장혜경, 2002).

- 정책: 자녀부양비 강제징수제도를 통해 국가가 부양비를 선납하고 구상권을 통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물음.

※ [외국의 사례]

현재 미국에서는 국가가 부양비를 선납한 후, 부양의무자인 남편의 경제활동상황을 전국 취업실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 가사노동 가치의 인정과 평가

- 방향: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현재 화폐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비가시적 노동으로 남아있어서 여성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기반으로 작용함. 그 결과 이혼시의 재산분할, 상해시의 보험비 산정,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각종 급부에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그 가치를 공식화하여, 각종 법적 문제에 대처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정책: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로의 전환 및 위성계정의 개발
  -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 개발
  - 가사노동 가치의 국민계정 산입을 위한 위성계정의 개발
- 공식된 가사노동 가치의 적용 점검
  - 이혼소송 등 법적 소송시 가사노동 가치 평가 현실화 점검
  - 보험 및 기타 보상에 있어 기업들로 하여금 현실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모색

- 추진체계 마련
  - 1단계: 여성부가 주축이 되어 여론과 연구를 이끌어냄.
  - 2단계: 법무부와의 업무연계 형성.
  - 기 타: 가사노동 가치의 국민계정 산입에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의 긴밀한 업무협약이 요구되며 사회보장에 관련된 부문에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협력 필요.

## 2 가족의 보호기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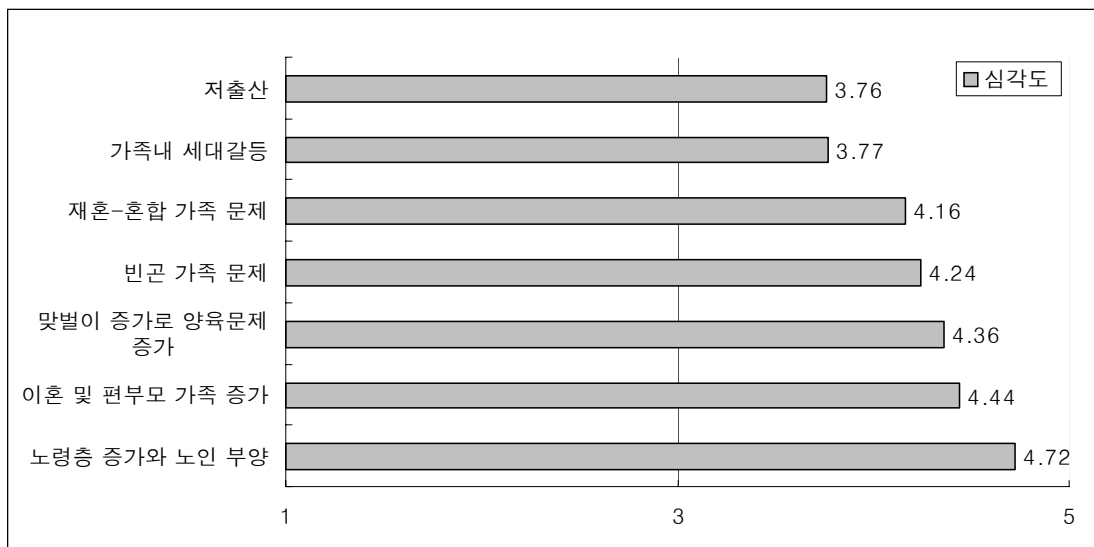
### ○ 출산수당,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 자녀양육으로 인한 소득저하효과를 보완하고, 출산률 저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책의 의미로서 아동과 관련한 수당 제도의 도입을 촉진함.

### ○ 여성의 노인부양노동의 가시화, 지원체계 구축

- 방향: 노령화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요보호 노인에 대한 부양 노동이 실제로 여성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의 이해와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부양노동의 사회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 가장 심각한 가족 문제와 당면한 가족정책의 과제는 바로 노령층증가와 노인부양의 문제임(한국가족학회, 2002).

### <그림> 가족 문제에 관한 심각성 인식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효와 여성개인의 희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이 지적되고 있음.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주요 수발자는 며느리와 배우자인 여성들이며 이들은 평균연령이 54.7세로 다중역할과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함. 더욱이 여성의 공식적인 경제활동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노인부양 역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정책: 가족간호 휴직제도, 가족간호수당, 가족간호자 안식제, 정책의 남성 활용도 제고 등.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업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임.
- 1단계: 여성의 노인부양역할에 대한 가치평가 실시하여, 수발 노동이라는 숨어있는 노동(“invisible work”)의 가치 재발견.
  - 생활시간조사에 노인부양관련 내용 포함
  - 부양수당제도 도입

- 보험 및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인부양역할의 가치 반영
- 2단계: 가족부양 지원서비스의 확대 및 질적 향상. 예컨대 가족간호 휴직제도, 가족간호수당, 가족간호자 안식제, 가족간호도우미제도, 상가제도의 남성사용제고 등을 도모, 제정.
- 3단계: 노인의 독립가구 형성 지원. 가족법제의 변화, 호적제도(夫家入籍制)의 개선단계와 병행하여 부부중심의 가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독립가구 형성이 필수적임. 실비 노인요양시설의 확산과 홍보 및, 분거노인 주거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실비 노인요양시설의 확산, 홍보
- 분거노인 주거비용 지원(임대아파트 등)
- 추진체계: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 인지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성 인지적인 서비스 모델을 확산시킴

### ③ 가족관계의 개선과 성평등한 가족문화 구축의 기반 마련

- 가족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과 가족상담소 근거 법 마련
- 방향: 남녀의 가족에 대한 심각한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해체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족갈등을 조절,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양질의 상담·교육내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담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지원 필요.
- 현실: 최근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및 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

으로 가족의식에서 심각한 성적 차이가 발생. 또한 이혼의 증가로 인한 편부모가족의 특수한 가족 문제 상담 필요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상담 수요가 늘어나게 됨.

- 정책

- 예비 부부 결혼교육, 부부갈등, 고부갈등, 세대갈등에 대한 상담. 즉 가족 상담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부부 관계 및 부모 자녀관계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을 지향하여야 할 것임.
- 가정상담소에 대한 근거법의 수립: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수행을 도울 것임.

- 추진체계 : 행정자치부와 연계 확보

- 가족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별로 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함. 예컨대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가족 문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처

- 방향: 가족관계 민주화의 기본요소인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의식수준의 발전이 미약하며, 행정적 협조체계의 기반이 취약하여 가족정책의 주요사안으로 지속되어야 함.

- 정책

- 가정폭력 업무추진체계의 기능강화
- 상담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가정보호 및 예방기능 강화
- 수사와 재판에서의 피해자 편의 확충

- 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치료를 연계해 효율적 사회복지지원
- 가해자의 교육, 감독, 수강명령 등 프로그램 불이행자에 대한 가중처벌

#### ④ 가족정책 수행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 방향: 우리사회에서 지금까지의 가족정책은 단편적 차원에서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왔음. 그러나 최근 한국가족은 가치관의 급변, 여성의식의 성장 및 여성취업으로 인한 역할구조의 변화와 갈등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정책적 대처가 긴급히 요구됨.

##### ○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 젠더시각에 기반한 전국규모의 가족조사와 그에 기반한 정책보고서를 토대로 가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 ○ 범정부적 가족정책협의체 구성

- 가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간의 조정기능의 강화.

※ [외국의 사례]

프랑스의 ‘가족관련 부처간 대표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부처간 대표부가 상설.

##### ○ 가족정책전달체계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 9

## 평등문화 정착

- 평등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
- 남녀평등의식 정착 및 평등생활문화 증진
- 평등한 대중문화 환경 조성
- 문화생산자로서 여성의 역할 지원

### ① 평등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

#### ○ 남녀평등도시만들기 장려사업 도입

- 남녀평등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여성부에서는 「남녀평등한 민주인권복지 국가의 건설을 위한 여성정책추진계획」과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을 발표한 바 있음.
- 국제적으로도 「북경행동강령」과 지방자치단체 국민연맹의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여성에 관한 세계선언문』등이 채택된 바 있음.

- 이러한 각종 법령과 정책계획, 국제 선언의 내용을 지역 차원으로 확산하여 생활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행정자치부와 여성부, 광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초 자치단체의 남녀평등선언 장려사업을 도입함.

### 남녀평등도시만들시 장려사업 개요

#### [추진목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과 단체,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남녀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인권과 복지가 구현되는 “남녀평등도시”를 만들도록 장려함.

#### [근거]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등의 법률에서 차별 금지 및 여성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주관기관] 행정자치부와 여성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주관

[시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 [외국의 사례]

- 일본에서는 1994년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 장려사업을 실시함. 2000년까지 오사카부 사카이시(1995년 선언), 동경도 하무라시(1997년 선언), 동경도 스기나무구(1997년 선언), 스즈오카현 오오스카쵸(1999년 선언) 등 전국 3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남녀공동참획선언을 채택하였음.



- 주관기관, 관계공무원, 전문가, 여성·시민단체, 기업대표 등이 참여하는 남녀평등도시만들기 사업추진단을 구성함.

#### ○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지수 개발 및 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지수를 개발해 일반여성들이 체감하는 평등문화의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로 활용함.

※[관련지수 사례]

- UNDP의 남녀평등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Index)

- 지방자치단체별 평등문화 수준을 평가함.
- 평등도시상, 평등마을상을 제정하여 수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여성잡지 <Ladies' Home Journal>에서 1998년부터 매년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에 의견을 조사하여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The Best Cities of Women)을 선정, 발표.
- 평가항목으로는 낮은 범죄율, 보육시설과 제도, 환경과 삶의 질, 보수와 일자리, 직장에서의 남녀 형평성, 양질의 공교육, 여성보건서비스, 지방정부내 여성공무원 비율, 여성휴게실, 생활비, 여성기업주의 수, 이혼율, 여성과 남성의 비율, 시민의 투표율과 시민위임업무, 쇼핑시설 등이 포함.

## ② 남녀평등의식 정착 및 평등생활문화 증진

### ○ 일반공무원 및 교원, 경찰, 검사, 판사 등에 대한 남녀평등의식 교육 의무화

- 남녀평등의식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은 성별 교육대상에 따라 거부반응과 같은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남녀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함.
- 특히 사회전반에 영향력이 있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원, 경찰, 검사, 판사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남녀평등의식 교육은 지속적으로 확산, 강화되어야 함.
- 양 교육과정이 교육대상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제반 교육훈련의 필수과정으로 포함시켜야 함.
- 공무원 승진 및 진급에 필수 교육과정으로 포함하고 이를 위해 양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교원의 과정 이수를 의무화함.
- 여성관련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찰, 판사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함.

### ○ 기업의 성희롱예방교육 내실화

- 성희롱예방교육 미 실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교육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

### ○ 학교에서의 남녀평등의식교육 강화

-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남녀평등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함.

#### ○ 평등한 생활문화 증진

- 법·제도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의식 및 생활관습의 변화가 지체되어 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실질적 평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등한 삶의 방식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명절문화, 회식문화, 살림 등 생활 속에서의 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함.
- 여성단체의 평등문화 증진활동을 지원함.

### ③ 평등한 대중문화 환경 조성

#### ○ 방송프로그램의 여성 차별적 요소에 대한 심의 강화

- 방송프로그램의 여성 차별적 요소에 대한 심의규정을 강화함.  
※ 방송법 제33조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방송위원회내 여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함.
-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의 성차별성 문제가 제기되어도 그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제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시민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중매체의 여성 차별적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

#### ○ 방송·언론사 조직 핵심부문에 여성언론인 진출 촉진.

- 2001년 방송사 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은 9%, 계약직의 경우에

는 33.5% 수준으로 독일(38.8%) 등 세계적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방송·언론사의 관리직과 정책결정직에 여성참여율은 극히 낮음.

- 방송·언론사로 하여금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장려함.

#### ○ 평등문화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및 인터넷 사이트 개발 지원

- 평등문화를 지향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함.
- 인터넷상의 건전 여성사이트를 발굴, 지원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사이트를 홍보, 지원함.

### ④ 문화생산자로서 여성의 역할 지원

#### ○ 계층·지역간 여성문화복지 수준의 격차 해소

-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관련시설이 확충되고 여성들의 문화활동 기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주부, 농촌여성,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등의 접근권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실정임.
- 소외계층의 시설 접근권을 확대함.
  - 새로 건립될 여성문화시설의 입지 선정시 소외계층과 소외 지역에 우선 배정
- 계층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시설운영 방안을 강구함.
-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프로그램 개발

- 과정 이수 후 직업 및 사회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 그램 집  
중 개발

- 기관실무자의 기획력 증진을 위한 교육·연수기회를 확대함.

#### ○ 지역문화주체로서 여성의 활동 활성화

- 세계 각국에서는 전통문화를 복원하여 국가적 상징으로 발전시  
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상징 자원으로 개발하려는 노  
력을 지원함.

- 우리여성의 역사를 표상하는 인물과 사적, 유물 발굴
- 생활문화와 수공예 등 전통 여성문화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상징  
적 자원화 추진

여성문화유산의 국제교류 및 홍보 추진

- 지역여성문화에 기반한 특화사업을 육성함.
- 지역의 특징적인 여성문화 가꾸기
-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문화·역사만들기」사업에  
여성문화 부문 포함.
- 지역문화·관광분야 여성인력 양성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확대 및 인증제도 도입.

※ 문화유산해설사란, “문화유적과 지역문화 등을 국내외 관광객을 대  
상으로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문화체험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는 사람”을 의미함.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과에서는 2001년  
부터 「문화유산해설사 양성·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002년  
5월 현재 전국에서 500여명의 문화유산해설사가 양성되어 활동하  
고 있는데, 여성이 활동의 중심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역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봉사, 지역문화재와 관련해 활동하는 여성문화 소모임 활동을 지원함

#### ○ 성인지 문화통계 및 여성문화지표 개발

- 각종 문화시설 및 활동 현황 조사와 평가시 여성관련 요소를 도입함.
- 여성문화지표를 개발함

## 여성정책 추진체계

- 여성부의 기능 조정 및 강화를 통해서 여성정책의 효율화 제고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관련 부서의 강화 및 공식적 네트워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여성부의 집행기능 강화

### 가. 여성부의 여성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 ① 여성부의 직제 개편을 통한 조정기능 강화

- 여성부 내부 업무평가를 통한 조직 재정비
- 여성부의 구성원 다수가 정책조정업무를 영역별로 담당할 수 있도록 편제함.

## ② 여성정책 사업, 예산을 통한 총괄 조정

- 새로운 여성정책관련 사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정업무 내용을 확대함.
- 조정업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

## ③ 여성정책평가 업무의 강화

- 여성정책 이행상황 점검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례적인 점검체제 구축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점검틀 개발
-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강화
  -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평가 결과 공개
  -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시스템 개발



## 나. 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의 강화

### ①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의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조정실무회의, 여성정책담당관회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모색
  - 사업 및 예산을 통한 여성정책 조정
  - 인사를 통한 여성정책 조정
    - 여성 공무원의 새로운 인사정책의 원칙을 개발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 총괄
    - 중앙인사위원회의 여성인사 기록작성 형식을 검토하여 실제 즉각 활용 가능하도록 보완함.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적절한 역할 분담, 협의를 통한 조정사무 활성화, 내용 확대를 통한 조정업무를 강화하여 실질적 위상 확립

### ② 여성정책담당관실 확대와 연계 시스템 구축

- 6개 부처이외의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확대함.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방부 등에 우선적으로 신설함.
- 여성부와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업무가 연계·조정될 수 있는 구

## 체적인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 여성정책담당관회의 주기적 개최
- 각 부처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개발, 적극적 개입 조치 마련
- 여성부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여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일부 집행사무를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함.
- 여성부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공동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 개발·실행
- 여성부와 여성정책담당관실간의 인사 교류를 시행함으로써 업무 연계 강화

## 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강화

### ① 사업을 통한 여성부·지방정부간 연계

- 타 부처의 지자체와의 관계는 사업과 국고보조금으로 연계 되므로 여성부도 여성정책 관련사업을 개발하여 공식적 관계를 확대
  -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의 사업실행정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줌
- 지자체의 업무는 대부분 집행사무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집행적 성격의 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프로그램

램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지원함

- 기금사업에 대한 장기적 계획과 구체적 사업개발로 지자체와 연계

## ②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여성정책협의체 구성

- 여성부와 시·도 여성정책 담당 국장급간 정례적인 협의체 구성·운영
  -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담당 공무원간 네트워크 구성·운영
- 여성정책사업 프로그램 개발
  - 여성부 여성정책 추진계획 및 프로그램 제안
  - 사업실행 지원방안 모색

## ③ 특별행정기관과 여성정책 조정협의회 운영

-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이면서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방노동청, 지방경찰청, 농촌진흥청, 지방교육청,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특별행정기관과의 여성정책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④ 자치단체장 여성정책 연찬회 개최

- 여성부는 시·도의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찬회를 개최하여 단체장들의 성인지적 마인드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여성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함.

### 라. 여성부의 집행기능 확대

#### ① 타 부처의 업무중 여성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업무이관

- 타 부처의 업무 중에서 여성부에 적합한 업무 이관
  - 타 부처에서 주변화 되어 있는 또는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업무 중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부에 적합한 업무를 이관하여 핵심업무로 주력토록 함

#### ② 현행 집행업무의 재검토를 통한 확대

- 여성부가 현재 집행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성폭력 업무 운영 방안 재검토 강화
  -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신정부 경제정책의 여성일자리 창출에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되도록 운영내용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예산 확대

- ③ 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여성관련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부처 조정 및 지자체 연관 사업으로 실시
- 21세기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가족 또는 복지관련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므로 그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함